선거 정보, 도내 곳곳 대형투표함 속에 있어요

전북선관위, 전주역 광장 등 주요 도로·관광지에 설치
사전투표일·투표 절차·유효표 기준·1인 7표제 등 담아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거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자 도내 주요 도로 및 관광지에 대형 투표함 등 홍보시설물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2미터가 넘는 대형 투표함 또는, 사각기둥 형태의 시설물은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선거일을 비롯한 기본적인 선거정보와 (사전)투표 절차, 유효·무효표 기준, 1인 7표제 등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홍보시설물은 ▲전주 전주역 광장, 전주동물원, 세병공원, ▲군산 구시청광장, 은파유원지, ▲익산 서동공원, ▲남원 춘향테마파크, 서문주차장, ▲김제 시청회전사거리 등에 설치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사전투표일에는 한 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되고, 6월 1일 선거일은 2번에 나눠 투표를 하게 된다.

1차로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장·군수선거의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하고, 2차로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지역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한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므로,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시 이전 선거에 비해 선거인의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거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자 도내 주요 도로 및 관광지에 대형 투표함 등 홍보시설물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장중심 정부 기조 정책방향 적극 대응을"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기업지원 등 강화 필요
전북독자권 추진 · 지역 고유특성 극대화 해야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11일 '새정부 정책방향과 전북의 대응'을 주제로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과 미래 및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가 포함돼 있다.

이슈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 20개 약속, 110개 국정과제 중 전북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국정목표인 역동적 경제, 동행·행복, 자율·창의, 균형발전 부분을 중심으로 전북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부문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있어 기업지원 시스템 강화, 창업지원 강화 위한 창업중심대학 확대 및 창업기관 기능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주력산업 부분에서 스마트그린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 고도화, 중소기업 전용 R&D를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사회분야는 사회복지정책 DB구축을 통한 중복사업의 최소화,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강화로 성과중심의 지역복지사업 확대, 청장년층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창출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문화도시 신규지정 대응,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군간 공동대응, 웰니스 관광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농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4차산업 혁신 기술 융합 플랫폼 구축, 융합형 농산업 전문인력양성, 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의 성장을 제시했다.

자율과 창의를 키워드로 삼은 산업 분야는 대학·출연연 중심의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핵심 연구거점 지정, 디지털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창업교육, 디지털·AI 교육 강화가 미래 전북산업발전의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완주 수소상용차 국가산업단지의 완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국토의 공간정책을 5+2(호남권)가 아닌 5+3(전북독자권역) 형태로 설정해 전북발전의 균등기회 보장, 전국에서 유일한 Tri-Port(Air Port, Sea Port, Rail Port)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전북의 성장판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단+기업지원+창업+주거+문화) 조성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가 중요하며, 지역고유특성 극대화를 위한 과제로 탄소 R&D 거점기능 강화(전주), 완주익산 탄소소재부품 공급거점 육성(익산·완주)과 친환경모빌리티(군산), 첨단농기계(김제), 재생에너지(부안) 산업 고도화, 그린바이오 실증연구 및 산업화 거점(정읍·임실·순창·고창)육성, 그린 힐링치유벨트조성(남원·진안·무주·장수) 등을 제시했다.

이강진 연구본부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방향과 향후 발표될 세부 지역공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전북의 발전방향 설정 및 국가사업화를 위한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부처단계 정부예산 최대반영 방안 찾아

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

전북도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기조 변화, 6·1 지방선거 등 유동적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끝까지 굳세게 참아내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자세로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간 전북도는 지휘부를 중심으로한 부처 핵심인사 방문과 각 실국의 사업별 담당 실무진 설득, 유선 접촉, 이메일 정보제공, 중앙부처 출향인사 활용 등 축적된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물밑 활동을 전개해 왔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5월 11일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소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예산 최대 반영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부처단계 예산편성이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가진 중간 점검의 성격으로 각 실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확보 대상 사업별 부처 반응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이 논의 됐다.

부처단계 최대 예산반영을 위해 각 실·국별로 부처 반응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 중심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세부전략들이 논의 됐으며, 앞으로 각 부처의 기재부 예산 제출기일인 5월 31일 까지를 국가예산 확보 특별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휘부를 필두로 한 국회 및 부처방문 설득활동과 함께 정치권과 시·군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도 지휘부와 각 실·국장이 사업별로 부처 미온·부정적 사업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중앙부처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시·군 및 정치권과 부처 심의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미 반영 사업 중심으로 공조 전략을 마련하여 미온적 사업 예산반영, 과소 반영된 사업 증액 요구, 부처 실링 외 반영사업에 대한 실링 내 반영요구 등 막바지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새정부가 출범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논리 개발 및 타당성 확보, 도-시군-정치권의 빈틈없는 삼각 공조체계 구축 등 전략적 맞춤형 대응으로 부처단계부터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해 주길"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전북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지선 예비후보자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입후보예정자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회원 51명에게 본인의 명의를 밝혀 총 153만원 상당의 과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와 관계있는 단체 또는 임·직원은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일까지 남은 20여일동안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